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산업 전략: 압박 속 생산”

“China’s Techno-Industrial Strategy in the Xi Era-Producing Under Pressure”

» **저자** : Gerard DiPippo, Jonathon Sine, Benjamin Lenain

» **일자** : 2026년 6월 11일

» **출처** : 랜드연구소(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4012-1.html



- ❖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산업정책은 성장 추격과 수출 경쟁력 확대를 넘어 국가안보, 기술자립,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 중국 산업정책이 외국 기술 도입, 제조업 역량 축적, 세계 공급망 편입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외부 압박에 견딜 수 있는 자립적 산업체제와 전략기술 통제력이 핵심 목표로 부상하였다.
- ❖ 중국 당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제조, 전기차, 배터리, 양자기술, 저고도 경제, 상업우주, 수소, 첨단의료기기 등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기업지배구조, 지방정부 관리, 대외경제전략을 결합한 통합적 기술산업 국가 전략으로 작동한다. 당-국가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금융자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배분하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원한다.
- ❖ 최근 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재정 제약이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처럼 현금 보조금과 세제지원, 정부조달을 무한정 확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직접 재정지출보다 정부인도기금, 정책금융, 전략대출, 자본시장 개혁, 조달 기준, 기업 지정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비용을 국가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금융기관, 지방정부, 기업, 투자펀드에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표에 맞춘 투자와 중복투자, 비효율을 키울 위험도 갖고 있다.
- ❖ 기업 통제 방식도 강화되고 있다. 국유기업은 에너지, 원자재, 중공업, 안보 민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하고, 민간기업은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드론 등 빠른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역시 당 조직 내재화, 규제, 소수 국유지분, ‘작은 거인’과 ‘단일 챔피언’ 같은 지정제도를 통해 국가 목표에 맞춰 조정된다. 기업의 성과는 시장 경쟁력뿐

아니라 전략산업과 당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 ❖ 지방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의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 발전은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실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과잉투자와 지역 보호주의, 유사 산업단지 중복 조성, 가격경쟁 심화가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통일대시장’과 ‘반내권’ 정책을 통해 지방 간 중복 경쟁을 줄이고, 조달·규제·시장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 ❖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일대일로, 해외 산업단지, 표준화 전략이 중국 기술산업정책의 확장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자국 장비와 기술표준을 확산시키고, 국내 전략산업의 외부 수요를 창출하며, 공급망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 ❖ 이 전략은 중국의 제조 역량, 기술 축적,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중앙집권화는 지방 실험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정치화된 투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기술산업정책은 중국의 내수 부진과 생산성 둔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조업 생산이 국내 수요를 계속 초과할 경우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해외 시장의 저항을 키우고, 관세와 산업정책 경쟁, 무역구제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기술산업 전략은 성과와 압박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향후 세계경제와 산업질서의 주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